



정책자료 2023-04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인구정책기획단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2023-04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51-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f.2023.04>

## 발|간|사

한국 사회는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저출산 현상을 지난 40년 동안 경험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동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 인구문제에 대한 5년간의 범부처 종합 대응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가능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이 그간 순차적으로 수립되었다. 오랜 기간의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단 한번도 반등한 적이 없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구기관은 보다 폭넓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책 도출에 대해 더 실효적인 정책을 생성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해결력을 제고하도록 우리원의 자원과 연구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원은 기존의 인구정책연구실을 과감히

---

---

해체하여 어느 한 실에서 인구 관련 연구를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통념을 깨고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와 대응을 전사적(全社的)으로 행한다는 전제 하에, 인구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정책협의체의 운영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심도 깊게 연구되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원내외 전문가들과 인구정책기획협의체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            |
|------------------------------------|------------|
| <b>제1장 인구정책기획협의체 개요</b> .....      | <b>1</b>   |
| 제1절 인구정책기획단 .....                  | 3          |
| 제2절 인구정책기획협의체 .....                | 9          |
| <b>제2장 2023년 추진 과제</b> .....       | <b>13</b>  |
| 제1절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               | 15         |
| 제2절 인구정책기획협의체 과제 .....             | 27         |
| <b>제3장 2024년 협의체 과제 제안</b> .....   | <b>39</b>  |
| 제1절 2024년 과제 계획 회의 .....           | 41         |
| 제2절 2024년 협의체 제안 과제 .....          | 46         |
| <b>제4장 향후 5년간 추진 필요 연구과제</b> ..... | <b>53</b>  |
| 제1절 개요 .....                       | 55         |
| 제2절 과제 제안 .....                    | 56         |
| <b>제5장 결론</b> .....                | <b>103</b> |
| <b>참고문헌</b> .....                  | <b>109</b> |

# 표 목차

---

|  |    |
|--|----|
| 〈표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직제 규정 .....        | 3  |
| 〈표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제 규정 제18조(인구정책기획단) .....  | 9  |
| 〈표 1-3〉 인구정책기획협의체 구성 .....                   | 10 |
| 〈표 2-1〉 인구정책기획단 2023년 과제 목록 .....            | 15 |
| 〈표 2-2〉 인구정책기획협의체 2023년 과제 목록 .....          | 27 |
| 〈표 4-1〉 광역별 태아사망자 수 및 사망률(2020년~2021년) ..... | 78 |

#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 [그림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사적 인구 연구 수행 구도 ..... | 5  |
| [그림 1-2] 인구정책연구를 위한 인력 운영체계의 기본 구도 .....  | 7  |
| [그림 4-1] 전국 및 인천광역시 고령산모 추이 .....         | 77 |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인구정책기획협의체 개요

제1절 인구정책기획단

제2절 인구정책기획협의체



# 제 1 장 인구정책기획협의체 개요

## 제1절 인구정책기획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직제 규정

〈표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직제 규정

**제18조(인구정책기획단)** 인구정책기획단에는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 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의제 개발 및 국가전략 기획
- 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국제비교 연구와 국내 대책 연구
- 다. 저출산과 연관된 개인 및 가족 차원의 주요 특성 연구
- 라. 인구고령화와 연관된 사회·경제·문화적 영향과 대응 연구
- 마. 인구 구조변화와 연관된 중장기적 대응방안 연구
- 바. 원내외 저출산·고령화 정책 협의체 운영 주관 및 인구관련 해외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2.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 가. 인구구조와 분포의 변화 추이 및 특성 분석
- 나.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이동)의 내·외생적 영향요인과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 다. 인구변동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구변동 모니터링 수행
- 라. 인구·가구 추계 모형 연구 및 인구 기초·가공통계 개발
- 마. 인구정책 의제 개발, 평가방법 연구 및 정책 평가

####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 □ 인구정책기획단 설치 배경

- 1970년 「국립 가족계획연구소」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계획연구에서 시작하여 인구문제 연구는 물론 건강, 가족, 노인, 아동 등 인구 연구와 연관된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였음.
- 특히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 기본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되면서,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연구기관으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하였음.
-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원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연구본부,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등 다양한 명칭의 부서를 설치·운영해오다가, 2018년부터 인구 및 저출산, 고령화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인구정책연구실을 최근까지 운영하여 왔었음.
- 이런 가운데 인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연구성과도 매우 독보적이어서 2023년 1월 초 현재, 인구 관련 총 547편, 저출산 관련 총 622편, 고령화 관련 총 553편의 연구결과물을 생산하였고, 이에 보사연은 가히 인구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어디에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우리원의 이러한 연구 성과 및 기여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급기야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사회적인 큰 난제인 동시에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대두되었음.

- 따라서 우리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책 도출에 대해 더 실효적인 정책을 생성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력을 제고하도록 자원과 연구력을 집중해야 함.
- 이에 우리원은 기존의 인구정책연구실을 과감히 해체하여 어느 한 실에서 인구 관련 연구를 책임지고 실행한다는 통념을 깨고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와 대응은 전사적(全社的)으로 해야한다는 전제 하에, 핵심적인 기획 기능을 위주로 원장과 직접 소통하며 기동성있게 대응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와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를 둠.

□ 인구정책기획단의 주요 역할

[그림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사적 인구 연구 수행 구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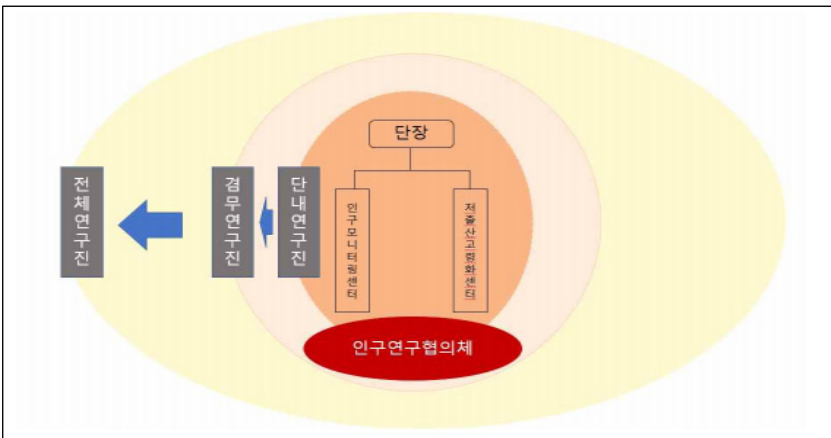
## 6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 첫째, 인구 추이와 구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도있는 분석
  - 주로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의 업무로서 현재의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과 향후 추이, 이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 이들로 인해 귀결되는 현재와 미래 영향력의 양상과 정도 등을 연구를 통해 밝힘.
-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연구 기획
  -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의 다년도 연구사업으로 진행 되는 일반과제를 활용하여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를 둘러싼 정책 동향과 사회 이슈 변화에 대응한 연구 사업들을 기획하고 이의 실행을 주관
- 셋째,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 정책 관련 원에 대한 수요 대응
  - 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기획재정부·복지부 등의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의 지방정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요구되는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정책 지원 등에 부응하여 이를 질서있게 수행하도록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단 내 및 타 실·단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
- 넷째, 인구 및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어젠다 형성과 이슈화를 위해 원 주도의 각종 사업 또는 정책 자료화 작업 등 수행
  - 인구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젠다 형성 및 이슈화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동향을 파악, 분석하고 우리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기 정책 자료 생산 등을 기획하여 실행

- 다섯째, 인구 관련 기초자료, 대표적인 연구물 등의 집적 및 주기적인 발간
  - 자체적으로 생산 또는 타 연구기관이 생성한 인구 관련 주요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발간(증장기적으로는 DB화)하고 원내·외 주요 연구물을 정리하여 최근의 인구 관련 저작물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집 발간
- 여섯째, 국내외 인구 관련 주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강화
  - 국내 인구학회를 포함하여 인구 관련 전문 집단과의 유기적 관계 및 협력사업 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인구 연구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적인 인구 연구 기관과의 실효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인구정책기획단 운영 체계

[그림 1-2] 인구정책연구를 위한 인력 운영체계의 기본 구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 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 인구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 전체의 연구진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위의 기본 구도에서처럼 우선적으로는 인구정책기획단의 연구진, 겸무로 구성된 연구진, 그리고 인구연구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활약함. 그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 인구정책기획단

- 두 센터에 인구, 저출산 및 고령화 연구자, 거시적 환경분석 관련 연구자로 구성하여 단 내에서 월 1회 및 수시 기획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여 기초안이나 아이디어를 생성

### - 인구정책기획단 겸무연구원

- 인구, 저출산, 고령화 연구에 성과가 있는 원내 연구진 및 소득보장·청년·사회서비스·보건·사회보장재정 분야 등에서 이와 관련된 각 실의 대표 연구진으로 구성함.
- 이들은 기획이나 연구 수행 관련 필요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안하고, 직접 연구 수행의 우선적 풀(pool)이 됨.

### - 인구정책기획협의체

- 단원과 겸무 연구원 중 각 영역(인구, 저출산, 고령화, 거시정책, 소득보장, 보건, 사회서비스, 청년, 사회보장재정 등)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하여 분기별 및 수시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사업과 연구 기획을 수행함.



## 제2절 인구정책기획협의체

### □ 협의체 구성의 배경

-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연구원 전체 실·단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수행하고자 내부 임시 조직인 「인구정책기획협의체」를 마련하여 운영
  - 직제규정 제18조(인구정책기획단)를 토대로 연구원 내 각 영역(인구, 저출산, 고령화, 거시정책, 소득보장, 보건, 사회서비스, 청년, 사회보장재정 등)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

〈표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제 규정 제18조(인구정책기획단)

#### ❖ 직제규정 제18조(인구정책기획단)

1. 바. 원내외 저출산·고령화 정책 협의체 운영 주관 및 인구 관련 해외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 협의체의 주요 역할

- 인구정책기획단의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과제 개발 및 선정
  - 연구 방향, 구체적 연구 주제 및 연구 주제별 수행 연구진 제안
  - 연구 과제 선정
- 인구정책기획단 정책 현안 대응 연구 및 사업성 과제 개발
  - 인식조사, 외부 기관 협동연구,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 및 사업 제안
- 인구정책기획단 인구포럼 기획 및 지원
  - 인구포럼 주제 및 관련된 전문가/전문연구기관의 정보 공유

1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 인구포럼 발표 및 토론 지원

□ 협의체의 운영방안

○ 상반기(1~3월) 월1회 정기적 협의체 회의 및 필요시 부정기적 회의 운영

- 정기 협의체 회의에는 전체 위원 참석, 부정기 회의는 해당 업무 관련 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함.

○ 구성

- 위원장 역할은 인구정책기획단장이 수행
- 위원은 인구정책기획단 센터장 및 각 실, 단 소속의 인구정책 기획단 겸무 연구자 중 실·단별 적정 수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함.
- 발령기간: 2023. 2. 1. ~ 2024. 1. 31.
- 인구정책기획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실무는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수행

〈표 1-3〉 인구정책기획협의체 구성

| 구분  | 성명  | 직급    | 소속                 | 비고            |
|-----|-----|-------|--------------------|---------------|
| 위원장 | 이** | 연구위원  | 인구정책기획단            |               |
| 위원  | 우** | 연구위원  |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 인구정책기획단<br>겸무 |
|     | 이** | 연구위원  |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               |
|     | 황** | 연구위원  | 노인정책연구센터           |               |
|     | 안** | 연구위원  | 사회서비스연구센터          |               |
|     | 윤** | 연구위원  | 건강정책연구센터           |               |
|     | 김** | 부연구위원 | 청년정책연구센터           |               |
|     | 김** | 연구위원  | 복지국가연구센터           |               |
|     | 고** | 연구위원  | 사회보장정책<br>평가조정지원센터 |               |
|     | 송** | 부연구위원 |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         |               |

□ 인구정책기획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3. 2. 17.(금), 10:00 / 세종실(518호)

○ 회의 내용

- 인구정책연구는 기본적으로 원 전체의 연구진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우선적으로는 인구정책기획단의 연구진, 겸무로 구성된 연구진, 그리고 인구정책기획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활약
- 인구정책기획협의체는 단원과 겸무 연구원 중 각 영역을 대표 하는 이들로 구성, 분기별 및 수시로 협의체 회의를 진행, 다양한 사업과 연구기획을 원 차원에서 행함.
- 인구정책기획협의체 운영 원칙에 대한 위원 검토의견
  - 명칭의 정리 필요: 인구정책기획협의체 vs 인구정책협의체
  - 인구정책기획협의체로 통일
- 위원별 소속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역할 중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2023년 추진 과제

제1절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제2절 인구정책기획협의체 과제



## 제 2 장 2023년 추진 과제

### 제1절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 2023년 인구정책기획단 과제는 연구과제와 사업과제로 구분
  - 연구과제(7개 과제): 인구현상 심층 분석 관련 4개 연구과제, 저출산 현상예의 정책 대응 관련 2개 연구과제, 고령사회 정책 대응 관련 1개 연구과제
  - 사업과제(6개 과제):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6개 사업과제 편성

〈표 2-1〉 인구정책기획단 2023년 과제 목록

| 구분    | 연구 영역                         | 과제명   |
|-------|-------------------------------|---|
| 연구 과제 | 인구현상 심층 분석                    |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br>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br>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시계열 분석<br>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
|       | 저출산 현상예의 정책 대응                |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방안 연구<br>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
|       | 고령사회 정책 대응                    |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
| 사업 과제 | 인구변동 및 정책 추진 모니터링<br>연구 기반 조성 | (사업)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발행<br>(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br>(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고령사회<br>(사업)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br>(사업)인구포럼 운영<br>(사업)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

## 1.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

### □ 국제인구이동(이민)의 동향과 주요 이슈 검토

- 국제 및 우리나라의 이민 동향
- 국제 인구이동의 이론적 및 정책적 쟁점

### □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

- 이민과 인구의 절대적 규모
- 이민과 인구의 연령구조, 성비, 부양비
- 이민과 인구의 구성
- 이민과 출산력/사망력 변동: 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행동
- 이민과 지역사회 인구변동(분포)

### □ 이민의 역할과 인구변동 대응 정책의 과제

- 인구변동 대응 정책으로서 이민의 가능성과 한계
- 이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파급 효과

## 2.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 □ 인구이동에 대한 국내외 연구 심층분석

- 국내이동과 이동양상의 일반적 특성 및 지역별·시기별 특성들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심층분석
-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이동에 대한 관심과 접근방법이 시기에 따



라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등의 연구에 대한 연구 시도

- 우리나라 인구이동 양상 변화에 대한 데이터 분석
  -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 시기별 인구이동량의 변화, 순이동 규모의 변화, 인구이동 흐름의 변화 양상 등
  - 인구이동자에 대한 특성 변화 연구: 지역별·시기별 이동인구의 특성 변화 분석
  - 인구이동의 파급효과 분석: 지역의 인구규모 및 구조, 인구선택성에 의한 거주 인구의 특성 변화 등
  - 인구이동에 대한 다양한 지수화: 기존 분석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인구이동 지표들의 산출 및 함의 도출
- 우리나라 인구이동 양상에 대한 종합화 및 정책 대응 함의 도출
  - 인구이동의 양상 유형화 및 유형 구성의 시계열적 변화 종합화
  - 지역별 인구이동의 양상·파급효과·정책 대응에 대한 현장 연구

### 3. 출산과 사망에 대한 거시시계열 분석

- 인구학적 시계열분석 주요 선행연구 조사, 정리 및 분석
  - 인구학적 기반 이론 연구(예: 인구변천이론, 안정인구모형) 조사, 성과 재정리
  - 대표적인 인구학적 실증연구 조사, 분석
- 인구 고령화의 문제와 정책 과제에 대한 주요 연구 사례 분석

## 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 인구사회학적 고령화 정책 연구 사례 내용, 성과 분석
- 경제학적 고령화 정책 연구 사례 내용 분석
  
- 출산력, 사망력에 대한 확률론적 거시 시계열분석 실증 방법론
  - 출생, 사망 관련 주요 인구 변수들의 거시-집계 특성, 확률적 특성
  - 출산력, 사망력의 계열상관성, 동조성(co-movement) 분석: 자기회귀, 분산분해, 비정상성, 구조 변환, 벡터자기회귀, 공적분 등
  - 기초적 벡터시계열 실험실 모형 구축
  
-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고찰
  - 기존 인구 대응 정책 기조와 수단에 대한 평가
  - 고령화 대응 전략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

## 4.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 지역 불평등의 개념과 특성 논의
  - 지역 불평등의 표면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함의하고 있는 특성 고찰
  - 지역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불평등 간 연관성 고찰
  
- 지역 불평등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불평등과 어떻게 맞물려 작용하였으며,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서

### 의 지역 불평등 특성 고찰

- 지역 불평등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제도 및 정책 시기별 고찰
-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선행 사례 및 논의 검토
  -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이 각각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과 관련 사례에 대한 다각적 검토
  -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쟁점과 정책 현안 탐색
- 지역 불평등이 인구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
  - 지역 인구 동태의 주요 요소(출생, 사망, 이동)별 심층 분석
  - 지역 불평등과 현재의 지역 인구 위기 간 연관성 분석
-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개선 방향 제시
  - 현 시점에서의 지역 불평등 완화 및 해소의 당위성 및 이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5.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방안 연구

-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의 필요성
  - 변화하는 조사 환경 분석
    - 일반 사회조사의 최근 조사 환경 분석: 지역별 응답 특성, 무응답 비율 등
    - 숙련된 조사원 수급 현황과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원 운영 특성

분석

- 조사원의 특성에 따른 조사 결과 차별성에 대한 검토

□ 조사 대상 및 표본 특성 분석과 개편 방향

○ 조사 대상 적절성과 표본 특성

- 성, 연령, 혼인상태별 표본 설계 특성 분석 및 합리적 조사 대상 설정
- 가구, 가족, 개인 등 조사 단위 정의와 측정 방법

○ 표본 규모 적정성

- 피임, 임신, 출산, 결혼 등 인구행동 사건의 적정 분석 규모와 표본 규모

□ 조사 방법 개편 방향

○ 비표본 오차와 관련된 조사원 숙련도의 영향 분석

○ CAPI 조사와 PAPI 조사 방법의 차이

○ 대면, 비대면 CAPI 조사 방법의 고도화 방안

○ 조사 소요 시간과 조사 문항 수의 적정성

□ 조사 내용 개편 방안

○ 인구행동 변화 추세, 성인기 생애경로의 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조사 내용 구성안 도출

○ 임신, 결혼, 출산 행동 및 가치관 등의 영역에서 시계열 유지 항목 선정

- 경제활동 특성에 대한 개편 방안 도출
- 가치관과 인식에 관한 조사 문항 개편 방안 도출
- 시험 조사와 조사결과 비교 분석
  - 개편할 조사 방법의 신뢰성 검증과 개선 방안
  - 시계열 유지 항목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개편 조사 체계의 적절성 분석

## 6.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 아동수당의 목표 및 규모의 적정성
  - 아동수당의 목표로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및 이를 통한 아동의 빈곤 해소와 건강한 성장 발달), 아동가구의 삶의 질 향상, 출산율 제고, 인구의 질 향상(아동투자) 등 검토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기준과 지급액 수준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정한지를 평가
- 정책 대상자의 아동수당에 대한 평가
  - 아동수당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사용처,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 아동수당의 출산 의향 및 계획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파악
- 아동수당의 개선 방안
  - 현금 지원 규모에 따른 출산율 제고 효과 분석 및 정책 대상자 조

사 결과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의 현금 지원 규모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 현금 지원의 출산율 제고 효과의 이질성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 아동수당에 대한 재정 전망

-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시나리오별 장래 소요재정 추계
- 개선 방안(지급액 및 지급 대상 조정) 적용 시 시나리오별 장래 소요재정 추계

## 7.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 공식 노인 돌봄 현황 및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 노인돌봄서비스 소개

□ 비공식 노인 돌봄 현황 분석

- ADL 또는 IADL 제한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파악,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돌봄 제공 현황(돌봄을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간 관계, 돌봄 제공 여부, 돌봄 강도 등) 파악
-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다양한 특성들 분석

□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분석 방법: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가 내생적임을 언급한 바,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내생성을 해결하고 인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활용 예정
  - 종속변수: 근로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
  - 관심변수: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
  - 통제변수: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거주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등 다양한 변수 고려
- 공식 노인 돌봄 제도 관련 논의
- 설문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음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유를 다각도로 파악,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점 등을 모색할 예정

## 8.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발행

- 인구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구축
- 인구주택센서스 원자료, 인구추계자료, 인구동태조사 원자료 등을 분석·가공하여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
- 인구 모니터링 지표 산출
- 인구 및 인구증가
  - 출생 및 사망
  - 가족형성 및 세대

## 2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 노동력
- 인구이동 및 지역인구

### 9.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저출산

- 저출산 대응 분야 정책의 배경 및 현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분야 정책 검토
  -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배경 이해
- 저출산 대응 분야 주요 정책 모니터링
  - 주요 정책의 적절성 모니터링
  - 주요 정책 추진의 효율성 모니터링
  - 주요 정책의 충분성 모니터링
-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
  -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 정책 수요자의 정책 미충족 욕구(unmet need) 충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1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고령사회

-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분석 틀에 관한 고찰
  - 사회정책의 모니터링 방법론



- 사회정책의 모니터링 적용 사례 등
- 고령사회대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 고령사회대책 수립 배경 파악: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변천 등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대책 검토 등
- 고령사회대책의 모니터링
  - 세부 정책별 계획의 적절성(필요성, 합목적성 등) 모니터링
  - 세부 정책별 이행의 효율성(인지도, 예산 등) 분석
- 고령사회대책의 정책 방향 도출
  -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방향성 도출
  - 고령사회대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방향 제시

## 1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정책협의체 운영

- 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목표와 비전 진단
  -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비전과 목표의 제4차 기본계획과의 조응성 및 시의성 등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방향성 설정
  -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 26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정책 연구의 방향성 설정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의제 개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의제 도출
  - 정책 의제에 따른 연구 과제 도출

## 12. 인구포럼 운영

- 인구와 저출산 분야 현황 점검 및 정책의제 검토
  -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지표 점검, 쟁점사항 논의, 관련 정책 의제 논의
  - 인구정책 및 저출산 대응 정책 의제 검토
  -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포럼 내용 구성 및 실행 계획 수립
- 고령사회 분야 현황 점검 및 정책 의제 검토
  - 인구 고령화 추세 점검 및 국제 비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점검
  - 고령사회 대응 정책 의제 검토
  -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포럼 내용 구성 및 실행 계획 수립

## 13. 2023년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성과

- 2023년도 사업 기획과정 검토
  - 정책 추진 환경 진단 및 주요 정책 의제 검토

- 주요 정책 의제별 쟁점 파악
- 2023년 연구사업 편성 세부 내용
- 2023년 주요 사업 성과 진단
  - 연구사업 주요 추진 성과 진단
  - 사업의 정책화 성과 진단
  - 연구 기반 조성 과제의 성과 진단
- 향후 사업 추진 방향 제언
  - 주요 사업 성과 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안

## 제2절 인구정책기획협의체 과제

〈표 2-2〉 인구정책기획협의체 2023년 과제 목록

| 연구 영역             | 과제명  |
|-------------------|--|
| 인구현상<br>심층 분석     |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br>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미래 인구변동 시뮬레이션  |
| 저출산 현상에의<br>정책 대응 |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br>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br>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 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br>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대응과제<br>난임시술 성과의 현황과 대응과제         |
| 고령사회<br>정책 대응     |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br>인구구조변화 대응 공·사적 노후소득보장 전망과 과제<br>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br>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

## 1.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 성비 불균형 현황 및 전망과 미혼인구 특성
  - 다양한 결혼 성비 불균형 지표 산출 및 추세 전망
  - 출생 코호트에 따른 미혼인구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
- 성비 불균형과 결혼 간의 관계 분석
  - 성비 불균형에 따른 결혼시장의 수요과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성비와 결혼 건수에 관한 거시적 분석
  - 거시적 분석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성비 불균형과 결혼 간의 관계 분석
- 미혼인구의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한 심층 분석
  - 미혼인구를 생애 미혼인구와 그 외 미혼인구로 나누고 각각을 분석하여 정책 수요 파악
  - 또한, 결혼 의향 여부에 따라 정책 욕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분석

## 2. 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미래 인구변동 시뮬레이션

- 코호트-요인법에 기초하여 미래 인구를 전망하는 인구추계 모형 구축
  - 출산력, 사망력, 이동력 등 인구변동 요인들에 대한 미래 전망치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성별 및 연령별 미래 인구를 전망하는,

즉 코호트-요인법에 기초한 인구추계 모형(프로그램) 구축

- 인구추계 모형에 기초한 미래 인구변동 시뮬레이션 테스트
  - 코호트-요인법에 기초한 인구추계 모형의 세부 사항 및 향후 연구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인구추계 모형을 활용할 때 검토될 필요가 있는 사항 점검
  - 인구추계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인구변동에 관한 기초 시뮬레이션 및 향후 활용 방안 검토

**3.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 최근 한국의 결혼 이행 및 비혼 동거 관련 변화
  - 한국의 결혼 이행 및 가족 생활 실천 관련 변화
  - 비혼 동거 관련 생각, 태도 및 실천 변화
- 비혼 동거 관련 제도의 국외 사례 및 한국 제도 현황
  - 국제 사회의 비혼 동거 관련 추이
  - 비혼 동거 관련 제도의 국외 사례 (프랑스, 독일, 일본)
  - 한국의 비혼 동거 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제도
-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 및 욕구
  - 다양한 동거 관계 파악
  - 동거 사유에 따른 비혼 동거 생활 특성 및 관련 태도
  - 생애 미혼, 이혼·별거·사별 등 혼인 상태에 따른 비혼 동거 특성

- 비혼 동거 생활의 어려운 점 및 정책 욕구
- 한국의 비혼 동거 인구와 혼인 인구 비교
  - 결혼 관련 동일 사안에 대해 비혼 동거 인구와 법적 혼인 인구의 유사성과 차이
  - 혼인 인구와의 비교를 통한 비혼 동거의 특성 파악
- 한국의 비혼 동거 관련 정책 방향
  - 현재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 특성을 다각도에서 파악하고, 국외 사례의 시사점 등을 종합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비혼 동거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함.

#### 4.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 성인기 이행의 제도적 환경
  - 교육, 훈련, 취업, 주거, 결혼 등의 추세
  - 정부 지원 정책 및 해외 동향
- 개별 가족 수준에서 이해하는 성인 이행의 위험 파악
  - 성인이란 무엇인가
  - 성인이행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고비(위험)는 무엇인가
  -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경험은 무엇인가

- 이행 지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부모의 사적 부양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 이행 지원의 공적 책임 근거는 무엇인가
  - 보장되어야 할 이행기의 길이, 내용은 무엇인가

## 5.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 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의 특성
  - 교육 이행, 일자리 이행, 가족 이행의 일반론적 특성
  - 교육 이행, 일자리 이행, 가족 이행 특성의 변화
-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특성의 미시적, 거시적 맥락
  - 성인기 이행과정의 아동기 성장환경의 영향요인 분석
  - 성인기 이행과정의 노동시장 등 사회제도적 영향요인 분석
  - 성인기 이행과정의 외부충격(경제충격, 감염병) 영향요인 분석
-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해외 사례 검토
  -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의 국가별 특성
  -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와 관련된 시장, 가족, 정부의 역할
  - 해외사례 검토의 정책 함의
-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함의
  - 기존 정책 검토

- 청년정책 방향 제시

## 6.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대응과제

- 출산 및 아동양육 현황 및 결정요인 분석
  - 출산 및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통계 분석
  - 저출산 대응 관련 문헌조사 및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 및 아동·가족 부문 복지재정에 대한 국제비교 및 사례 연구
  - 주요국의 아동·가족 부문 복지재정지출 현황 및 인구 등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출산율 회복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아동·가족 부문 복지재정의 특징 분석
- 재정수입 측면에서 현행 조세와 준조세(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체계의 출산·양육 지원 현황 및 유인(incentive)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개인소득세와 소비세를 중심의 출산·양육 관련 조세 부담 및 지원 현황 분석과 유인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준조세(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출산·양육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재정지출 측면에서 아동양육가구의 정책 체감도 및 출산율 제고 방향의 복지재정의 구조적 개선 방안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가족 부문 재정지출 현황 및 재원구조 분석
- 출산·양육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원 및 재정운용 개선 방안

## 7. 난임시술 성과의 현황과 대응과제

-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난임시술 임신 및 출산 성과
  - 제외수정: 분석대상 기간 동안 난자 채취를 한 여성을 대상으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수정, 배아 배양, 배아 이식 등 각 진행 단계별 시술건수 및 시술 실 인원, 시술비용(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임신율, 출산율 산출
  - 인공수정: 분석 대상 기간 중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을 실시한 건 중 제외수정 시술행위의 보험급여 청구코드가 없는 건을 대상
- 난임시술여성의 다태아, 미숙아 및 신체적 정신적 영향 분석
  - 난임시술여성의 시술, 임신 및 출산 이행과정에서의 시술 부작용 의심 실태 및 다빈도 고위험 임신 요인·질병 발생실태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 대조군을 설정하여 연구 진행
  - 2018년~2022년 기간 중의 난자 채취 여성 또는 배아 해동 여성을 대상으로 과배란 유도 및 시술, 임신 및 출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한 다태아, 미숙아 출산 빈도, 신체적, 정신적 영향 및 유산, 자궁외임신 등의 발생빈도를 분석
- 난임시술여성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요인과 선호체계를 무작위

선택실험을 통해 추정

-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산선택실험(Discrete choice experiment)을 통해 선호체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점에서 난임시술 관련 정책 제언

- 보험 급여 제도 개선 방안
-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
- 기타 선진국의 난임 관련 사회적 지원 정책 조사 및 제언

## 8.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 베이비부머와 생애전환기

- 한국 베이비부머의 생애와 특성
- 생애전환기의 발달적 특성
- 노인 생애전환기 적응 관련 이론

□ 국내외 베이비부머 생애전환기 지원 사례

- 국내 관련 정책 검토
- 국외 지원체계 사례 수집과 기능 분석, 시사점 도출

□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형태와 자원에 대한 심층분석

-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형태와 영향요인 분석

- 공식노동/비공식노동/시민사회 및 여가활동 간의 대체·보완관계 여부 분석
- 베이비부머 사회 참여 현황과 욕구 조사
  -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또는 노동시장 (재)진입, 기타 사회 참여활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구하여 정책수립의 근거 도출
- 생애전환기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제시
  - 문헌연구, 조사, 분석을 통해 확인된 생애전환기의 발달특성과 베이비부머의 고유한 코호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

## 9. 인구구조변화 대응 공·사적 노후소득보장 전망과 과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 및 최근 정책 변화 파악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제도 운영 및 재정현황, 가입 및 수급 실태 등 최근 실적자료 분석
  - 기초연금 인상,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중소기업 기금형 도입 등 최근 정책 변화 파악 및 연금 수급 실태 등 향후 수급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노후소득보장 중장기 전망에 대한 국내외 연구사례 조사

36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 OECD 등 기존 연구사례별 전망방법론과 연구결과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노후소득보장 현황 파악 및 최근 정책 이슈 파악
  - 노후소득보장 운영 현황과 제도적인 한계점 파악 및 최근 정책 이슈 검토
  - 인구구조 변화 등 제도 외적인 환경 변화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점검 및 개선 방향 모색
- 노후소득보장 전망 및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장기 전망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과제 검토
  -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방향 검토 및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분석 결과와 현재 제도 비교
  - 중위시나리오와 저출산 인구시나리오별 노후소득보장 분석

**10.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가족구조 변화 관련 법적·제도적 쟁점 분석
  - 중고령 1인가구에 대한 법제 현황 및 쟁점 분석
  - 중고령 1인가구 관련 정책 분석
- 국외사례 분석
  - 각국의 중고령 1인가구에 대한 법제 현황 분석

- 각국의 중고령 1인가구 지원 정책 분석
-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와 특성 변화
  - 중고령 1인가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 분석
-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제시
  - 중고령 1인가구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 11.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 체계 연구

-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합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소득·소비 및 자산·부채 결합적 관련성에 대한 생애 관점의 이론적 의의와 함의
  - 생애 관점 소득·자산 분석모형 정교화
- 생애 관점 소득·소비 및 자산·부채 결합 분포 분석
  - 국내 최근 횡단면 연령별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 국내 주요 코호트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 종단 추세 분석
-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국제비교

- 주요국의 연령별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
- 생애주기별 소득-자산 운용 실태 및 정책 수요 실태 파악
  -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의 생애주기별 소득 및 자산 운용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소득보장 및 자산 형성-활용 정책 이용 현황 및 인식, 정책 수요 조사 결과 분석
- 소득-자산 기반 정책 분석
  - 국내 현행 소득-자산 기반 복지정책 현황
  - 주요국 소득-자산 기반 복지정책 분석 및 한국에의 함의 도출
- 생애 관점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재구조화 방안
  - 청년기 자산 형성, 중장년기 자산 구축, 노년기 자산 활용에 이르는 생애 관점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재구조화 방안 도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3장

## 2024년 협의체 과제 제안

제1절 2024년 과제 계획 회의

제2절 2024년 협의체 제안 과제





## 제 3 장 2024년 협의체 과제 제안

### 제1절 2024년 과제 계획 회의

#### □ 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3. 2. 17.(금), 10:00 / 세종실(518호)
- 2023. 11. 8.(수), 14:0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회의실

#### □ 2024년 과제 개발 의견

##### ○ (의견 1) 생애과정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길어짐. 과제(안)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이행기 청년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 (차년도) 개인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여기에는 불평등을 비롯하여 인구구조 등 각 실·단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
- (차차년도) 이전 연구를 토대로 사회정책의 접근 방식과 대응 방식에 대한 제언
- (추가) 이행과정에서의 불평등

##### ○ (의견 2) 보건의료와 인구는 결국 질적인 측면에서 접점이 있으며, 보건의료는 보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인구집단에

적용 후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방식 고민이 필요함. 과제(안)은 다음과 같음.

- 재택이나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 기반의 여러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를 의료계 관점이 아닌 돌봄의 관점에서 평가
- 현장종사자 인력 연구를 넘어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연구
  - 예) 중증장애인/시설거주자에 대한 치과의료, 의료기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대한 연구 포괄
-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으로 노인 의료비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 의료비 관련 연구주제 발굴 필요
- 돌봄에서는 지역완결성을 이야기하지만, 의료에서는 중증/희귀질환과 같이 지역완결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지역완결성이 해당되지 않음. 지역에서 다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책임성 관점에서 연구과제 개발이 필요해 보임.

○ (의견 3) 청년, 중장년, 노년의 횡단면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생애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복지법, 중장년복지법에 대한 논의 및 법안 발의가 예상됨. 이를 고려할 때 미리 청년부터 노년기까지 사회적 위험을 정리하고, 현재 정책들과 비교하여 정책 수요와 공급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의견 4) 과제(안)으로는 지역별 인구추계 모델 개발, 이를 통한 지역별 기초연금 재정 등 재정 관련 연구, 중위가정을 넘어선 출산/사망 리스크가 사회재정에 미치는 영향

- 연령기준 조정(노인)에 따른 관련 사업의 재정 변화(제도 및 지

자체 재원) 등을 계량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조정에 따른 해당 비용만큼이 아닌, 가입의 탈퇴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 필요

○ (의견 5) 외부에서는 인력에 대한 요구가 많고, 현 정부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과업은 다시 제시되었음. 수탁과제로는 면밀한 연구 수행이 어려움.

- 보건복지인력을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연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변화와 사회서비스 인력전망이 필요함.
- 지역별, 지역 간 인력수급 문제를 꾸준히 가지고 갔으면 함.
  - 서비스를 개발해도 공급할 인력과 인프라가 없어 예산집행 조차 못하는 지역이 발생

○ (의견 6) 현재 급부상한 주제는 중장년층임. 복지부에는 관련과가 없는 상황, 중장년에 대한 서비스 요구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음.

- 아직까지는 1인가구(고독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실수요는 어떠한지, 어떤 전달체계가 효과적일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음.
- 기존의 연구는 곧 노년층으로 넘어갈 중장년층의 입장이었음. 서울시에서의 노력은 결국 일자리 및 재취업이었고, 특별한 수요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독사 역시 눈에 보이기에 접근 가능한 지점임.
- 그러나 가족과 출산조사의 부가조사 형태 등으로 중장년층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2023년 가족과 출산조사 개편 연구에서 이를 다룰 필요가 있음.

#### 4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 연령 기준에 초점을 두다보면 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임(예: 34세 기준을 넘어선 청년 인구?)
- 보건쪽에서는 중장년 접근은 생애검진 외에 없음. 개인보다는 가구가 어떠한 형태냐가 더 중요함.

#### ○ (의견 7) 기타 다음의 과제(안)을 제안함.

- 미취업 청년층에게 주는 보조금의 장기 효과 및 파급효과
- 세대간 소득 이전, 세대간 조세 형평성 및 복지 부담
- 고령자의 연금과 일자리의 선호체계, 연금수급연령 적정기준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평가

#### ○ (의견 8) 극단적인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대응한 특징적인 정책 및 영역들을 추려내는 작업 필요

- 예컨대, 20~30년 후에 당면할 인구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정책 발굴, 극단적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 발굴, 극단적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수준의 경제상황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상당수의 정책들(교육, 돌봄, 직업 등)은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소멸 등을 걱정하지 않더라도(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을 것임.

#### ○ (의견 9) 시그니처 정책 발굴, 핵심 정책 발굴, 정책 과제 강조 등 필요

- 그동안 논의는 있었으나 정책 어젠다가 되지 않은 부분, 연구자들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에 대한 과제화 추가 필요

#### ○ (의견 10) '주된 일자리 이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논의들이 결

과적으로 직업과 일자리에 주로 특화되었기 때문에 '사회활동' 용어에 대한 적절성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의견 11) 인구 규모 축소와 경활인구 감소는 분명한 결과로,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민 정책과 연관지어볼 수 있음.
  - 이민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인권 보장, 혐오 X)
  - 동포들의 자녀(2~3세대)가 국내에 정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의견 12) 저출산 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출생 이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과 그 이전에 대한 정책 과제 발굴에 대한 고민 필요
  - 결혼이 피해야 할 무언가가 되지 않도록 결혼에 대한 지원도 고민
  - 동거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문제도 언급했으면 함.
- (의견 13) 전기 노인, 후기 노인 등 노인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 특히 젊은 노년층(75세 이하)는 역량과 체력을 가지고 있어 '일과 사회복지의 결합'이 매우 필요함.
- (의견 14)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적 경제와 맞물린 과제 개발이 필요해 보임.
  - 노년기에 나타나는 역할 상실에 있어 사회적 경제가 연계된다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직업(수입)과 사회 기여를 함께 얻을 수 있음.
    - 예컨대, 젊은 층 자녀에 대한 돌봄
- (의견 15)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이

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노인들은 과학기술분야가 약하니, 노년층 초기 때 1~2년 대학교를 다니게 함.

○ (의견 16) 각 기관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된 연구들 중 인구나 관련된 내용들을 추려 서로 공유하고 발표, 토론하는 자리가 있으면 함(세미나 등 / 인구 연구의 날).

- 사전적으로 과제 개발 계획부터 공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사후적으로라도 2023년 연구들에 대한 인구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

## 제2절 2024년 협의체 제안 과제

### 1.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

□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당시 노동시장 진입(혹은 사회진출)기의 청년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오늘날 각 국가별 청년정책 마련의 계기로 작동하였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청년고용률을 지금껏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에 미치는 악영향을 통해 오늘날 청년 세대를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Tyson & Madgavkar, 2016)로 위치짓고 있음.

- 최근 출생 세대는 과거 세대에 비해 절대적 (소득)이동성이 저하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되고 있으며, 경기수축기 노동시장 진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 형성, 건강, 사회인식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von Wachter, 2020).
  - 한편, 과거 (집을 떠나,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성인으로서의 이행이 단선적이고 연속적인 사건(event)이었다면, 복잡해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행의 과정이 불연속적이고 불안정하게 변화하면서 성인으로서의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늘고 있음. 또한 이행 조건의 차이에 따른 이행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는 졸업-정규직 취업-은퇴의 전통적인 생애과정에 기초하여 구성됨에 따라 새로운 생애과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유발하고 있어 현 시기 이행기 청년들의 생애사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예견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부정적 영향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 고안이 필요함.
  - 이에 단선적이고 연속적인 이행에 맞춰져 있던 사회정책들이 변화한 이행의 특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성인 이행기의 주요 국면별 이행 양태와 그 변화를 탐색하는 종합연구들(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은기수,

박건, 권영인, 정수남, 2011;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남춘호, 남궁명희, 2012 등이 있지만 대부분 10년 정도가 경과하여 최근 10년간의 환경 변화와 이행의 양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연구는 부재함.

- 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주로 노동시장 이행에 초점을 맞추거나(이승렬, 2015), 니트 청년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노혜진, 2021 등), 이행의 국면을 취업과 결혼에 초점을 맞춘 연구(노법래, 2019)로써 청년기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음.
- 최근 10여년 간 대학진학률, 대학졸업 소요기간,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 혼인연령, 출산연령 등 주요 이행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일자리 이행의 조건이 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플랫폼 노동 등 일자리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19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충격 발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이행기 관련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선행연구(이병희 외, 2010 등)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루어진 연구로써, 금융위기의 충격(고용률, 생애소득 등)의 여파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진 측면이 있어 경기 충격의 장기적 영향을 포착해낼 수 있는 연구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한편, 선행연구들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는 제한적임. 예컨대 이병희 외(2010)는 주거 분리에 관한 해외사례에 국한되고 있고, 안선영, Cuerbo, Wyn(2010)은 호주 사례에 국한되어 있는 등 연구의 영역과 국가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이에 성인으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생애사의 근본적 변화 과정에 있



는 청년들의 삶의 궤적의 변화상과 그 요인을 파악하고(1차년도), 이행과정 변화의 개인사적 영향(미시적 접근) 및 사회경제적 영향(거시적 접근)을 예측함으로써(2차년도),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이행과정에 조응하는 사회정책 개편방향을 모색(3차년도)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과제 제안

**가. (2024년)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 이행 특성 변화의 영향**

□ 연구목적

-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의 변화가 개인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청년정책 및 인구정책적 함의 도출

□ 연구내용

- 이행과정 변화의 미시적 영향(개인의 소득, 신체·정신건강, 가족 형성 등)
- 이행과정 변화의 거시적 영향(사회보장 분담-수혜 구조, 노동시장, 소득·자산 불평등, 혼인율 및 출산율 등)
- 청년정책, 인구정책 함의

**나. (2025년)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 이행 특성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개편 방향**

□ 연구목적

- 현재의 사회정책이 과거의 단선적이고 안정적인 이행과정에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 이행과정에서 관찰되는 불연속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이 재편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변화된 청년기 이행 특성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의 개편방향을 모색
- 연구내용
  - 소득보장정책(기초보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상병수당 등)
  - 저출산고령화정책(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 및 양육 정책 등)
  - 돌봄정책

## 2. 지역별 인구추계 모형 구축

- 지방재정, 지역별 사회서비스 등 각종 인구변화 대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지역별 인구추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임.
- 이에 2023년 “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미래 인구변동 시뮬레이션”의 후속 과제로 지역별 인구추계 모형 구축이 필요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인구추계 모형 구축을 통해 기존에 비해 보다 탄력적으로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정책 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음.

### 3. 장수 위험(리스크)을 고려한 사회보장 재정 분석

- 장수 위험은 공적연금 및 각종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과 직결되어 있음.
- 현재까지의 사회보장 재정 관련 연구는 특정 인구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위험까지 고려한 분석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의 가입 및 수급연령, 각종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연령 설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4. 생애 관점(청년-중장년-노년기) 사회적 위험 분해와 사회보장정책 정합성 제고 방안

- 저소득 및 건강, 실업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 이외에 정신건강, 돌봄, 시간사용, 고립, 고독사 및 자살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는 바, 청년-중장년-노년기 사회적 위험을 분해함으로써 생애 관점 정책 수요와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사회보장정책 공급의 정합성 평가 및 재구조화를 위한 근거 생산 필요

### 5. 보건의료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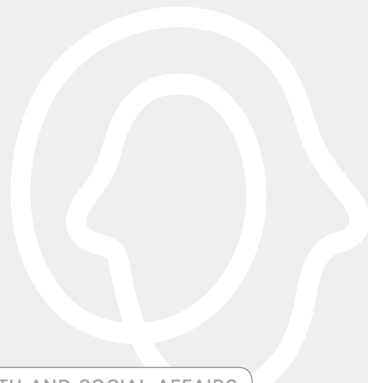
- 돌봄의 지역책임 강화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영역의 역할
  -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접근하는 특성을 가진 보건의료 영역이 ‘지속적·연속적’ 접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계체계

-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택의료 또는 방문의료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
    - \*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 또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모범적인 제공모형 개발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력 활용
-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현장 근무 인력의 여건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성과가 있음.
  - 고령화 등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의 새로운 인력 활용 영역 발굴
    - 예를 들어,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증장애인, 시설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과목(노년치과전문의) 신설 등
  - 또는 기존 보건의료 인력 가운데 의료의 영역을 넘는 활용가능성 타진
    - 예를 들어, 의료기사 범주에 포함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활용
- 기타 고려 가능한 주제
- 지역소멸과 보건의료 격차 해소
  - 노인의료비 문제(연령상한선 등의 변화 효과)
  - 기후변화/기후위기와 취약집단
  - 터미널케어 또는 안락사 등에서의 정비 방안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4장

## 향후 5년간 추진 필요 연구과제

제1절 개요

제2절 과제 제안



## 제4장 향후 5년간 추진 필요 연구과제

### 제1절 개요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지속, 고착화 및 구조화를 비롯한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함.
- 향후 5년간 추진했으면 혹은 추진이 필요한 연구주제 및 연구과제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요청하였음.
  - 더불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의 인구 및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내용과 인구정책기획단의 역할을 명시한 직제 규정을 공유하였음.
- 의견 취합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되었음.

## 제2절 과제 제안

### 1. 인구 수도권 집중화 실태 분석 및 완화 방안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022년 0.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음(통계청, 2023a).
  - 황인도 외(2023)는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하락하면 합계출산율이 0.414명 높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함.
    -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출산 비중 상승, 실질주택가격지수 하락보다 도시인구집중도 하락이 합계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큼.
  - 저출산 외에도 지방(역)소멸, 빈집 증가, 지방대학 위기,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켜야 함.
  -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실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현상(저출산고령화, 인구이동 등) 및 사회문제를 밝혀내며,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내용

-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수도권 집중화 현상 및 완화 방안에 관한 국외 사례
- 국내 수도권 집중화 실태 분석
- 수도권 집중화에 관한 인구영향평가
- 수도권 집중화 완화를 위한 방안
- 수도권 집중화 완화 방안이 저출산·고령화에 미칠 수 있는 기대효과

## 2. 지방소멸 인구위기 양상의 이해와 정책과제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위험의 현실화
  -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상황이 다가오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기반으로 118개 시군구를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
  - 그럼에도 기존 지표들로는 지방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
    - 선정 지표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작성방식이 불투명한 경우
    - 선정 지역과 비선정 지역 간의 차이가 불분명한 경우

- 선정 지역 안에서도 유형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
- 현황 파악뿐 아니라 미래 대비도 역부족인 상황

## 나. 연구 내용

- 지방소멸 인구 위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지방소멸 인구 위기상황의 유형 구분
- 유형별 향후 인구위기 진행에 관한 단계별 예측
- 지방 인구위기 상황에 대응한 정책과제

## 3.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2022년부터 지방소멸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배분하기 시작
  - 이 정책은 대표적인 지방소멸 위험 대응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2년간의 실적자료가 축적되었으므로, 이 기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내용과 정책 기여도

### □ 연구의 주요 내용

- 지방소멸기금 수급 지자체 선정 현황 및 기금 이용 현황 분석
- 지방소멸기금 지급이 제반 성과지표에 미친 효과 분석

### □ 연구의 정책 기여도

- 이 정책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지방소멸문제 대응 방안으로 꼽히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함.
- 기금 배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4.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용성 분석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음.
  - 광역지원계정으로 15개 광역시도, 기초지원계정으로는 89개 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이 운용되고 있음.
  - 연간 1조 원으로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 예정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금이나마 배분받기 위해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지역의 인구감소 정도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그 지역 고유의 인구정책들을 만들어 낼 것이 주문되었으나, 정작 각 지역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인프라 사업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음. 연간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함. 그러나 전국 지자체의 거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발히 사용되지 않는 인프라만 무성히 조성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이 지역사회의 활성화나 인구증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효용성 분석이 필요함.

## 나. 연구 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3년 이상의 운용 상황을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상황을 전수조사 혹은 권역별 표본조사로 실시
  - 각 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주요 연령대상에 주목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방식, 지역 유형, 인구변화 등을 토대로 유형화

- 연령별, 성별 유입, 유출 파악 및 유입 형태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있는 사용방안 제시 혹은 효용성에 대한 고려 후 해당 기금의 폐지까지 고려하여 분석하고 대안 제시

## 5. 지역소멸과 인구고령화 대응: AIP 관점에서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소멸지역의 고령화 비율 높음.
  - 지역소멸, 고령화 비율, 인구 유입 등
  - 지역소멸지역의 의료·보건·돌봄·복지서비스 부족 현상 가속화
  - AIP 저해 요인 증가: 병원 및 요양원 입소

### 나. 연구 내용

- 지역소멸지역의 의료·보건·돌봄·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 지역소멸 위험 지역 의료서비스 현황 및 부족
  - 지역소멸 위험 지역 보건서비스 현황 및 부족
  - 지역소멸 위험 지역 돌봄서비스 현황 및 부족
  - 지역소멸 위험 지역 복지서비스 현황 및 부족
- 지역소멸지역의 AIP 저해 요인 분석
- 지역소멸지역 인구고령화 대응 국내외 사례 분석: 한국, 일본, 프랑스,

유럽 등

- 지역소멸지역 선제적 고령화대응정책 수립
- 지역소멸지역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6.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인력 수요 공급 분석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 변화
  - 영유아, 유아, 아동돌봄 수요 변화
  - 고령화로 노인돌봄 수요 변화
  - 장애인 돌봄 수요 변화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돌봄 인력 공급 변화
  - 돌봄 인력 공급 변화
  - 돌봄 서비스 제공량 변화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수요공급 변화 대응 정책 마련 필요
  - 한국 OECD 국가 중 돌봄 인력 부족이 가장 높음.

## 나. 연구 내용

- 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수요 분석
  - 영유아, 유아, 아동돌봄 수요 분석
  - 노인 돌봄 수요 분석
  - 장애인 돌봄 수요 분석
  
- 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인력 공급 분석
  - 영유아, 유아, 아동 돌봄 공급 분석
  - 노인 돌봄 공급 분석
  - 장애인 돌봄 공급 분석
  
- 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수요 공급 언매칭 정도 분석
  
- 돌봄 인력 확보 방안 국내외 사례분석: 한국,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돌봄 인력 확보 방안 도출

## 7. 돌봄서비스 분야 해외동포·외국인력 활용 방안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인가구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돌봄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돌봄서비스 공급(제공인력)은 감소 추세

- 2039년까지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 인력 중 20~34세의 고학력자, 35~54세의 저학력자 감소 규모가 타 업종 대비 클 것으로 추정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부족에 따른 공급 방안으로 새로운 인력(다문화, 해외동포, 외국인력) 유입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정책 마련 필요
- 유사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거나 돌봄서비스 수요 추정 등 새로운 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세부 정책안을 제시한 국내 연구는 없음.

## 나. 연구 내용

- 돌봄서비스업 종사자 현황 분석
  - 17개 시도 사례 비교를 2차 자료 분석, 행정데이터 검토, FGI, 심층면접 등을 통해 수행
  - 내국인 처우 개선안과 해외동포·외국인력 유입안의 비용편익분석
- 돌봄서비스 분야별 해외동포·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 모형 설정
  - 가사서비스 분야, 간병서비스 분야, 노인/장애인/아이돌봄 분야별 모형 설정
- 돌봄서비스 분야별 해외동포·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추진계획 설정
  - 해외동포·외국인력 우선 유입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분야 설정
  - 돌봄서비스 분야별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 돌봄서비스 분야 해외동포·외국인력 유입 시 적용 가능한 비



자유형별 주무 부처와의 협력 방안

- 인력이 갖추어야 할 조건, 인력 규모, 송출국, 근무 여건, 지역, 고용 주체 등 검토

## 8. 인구정책 우선순위 조정 및 재구조화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고용 및 주거지원 등의 청년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계획(2019년)부터 청년 고용 및 주거지원 예산은 전체 저출산 대책 예산의 50% 이상에 달함.
- 이는 청년의 결혼을 늘리고 결혼연령을 낮춤으로써 출산을 늘릴 수 있다는 시각에 기반함.
  - 이러한 시각은 맬서스주의(Malthusianism)의 가정(assumption)인 실질임금(real wages)이 증가하면 결혼이 증가하고 결혼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과 동일함.
- 그러나 20세기 후반 선진국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는데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이 이루어짐.
  - 경제학에서는 Gary Becker의 신가정경제학(New Home Economics)에서 출산과 양육의 비용(cost of children)을 중심으로 분석함(Becker, 1992).
    - 여성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시장임금이 높아지

는 추세에서 전통적 성역할(traditional gender roles)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안되기 때문에 여성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증가하므로 출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또한 자녀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형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의 비용이 증가함.
  - 여성의 기회비용 및 자녀양육 비용이 소득수준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의미임.
- 사회학에서는 Ron Lesthaeghe의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론에서 가치관 변화(ideational change)를 중심으로 출산율 하락을 분석함.
- 교육수준 증가 및 경제발전에 따라 개인은 higher-order needs를 추구하게 되고, individual autonomy 및 self-actualization이 전통적 가치관보다 우선시 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임.
  - 제2차 인구변천에서는 sub-replacement fertility가 일반화되고 결혼과 출산의 분리가 일어나게 됨.
  - 이에 따라 오늘날 OECD 국가들 대부분은 대체출산율(2.1) 미만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 평균 비혼출산율(Births out of wedlock)은 2020년 기준 42%에 달함(한국의 2020년 비혼출산율 2.5%).
  - 제2차 인구변천에서는 sub-replacement fertility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확대가 필수적이고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대응은 일가정양립 확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기준으로 한 차별없는 가족지원, 이민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이민 정책이 포함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의 강한 결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한국 4.7, OECD 평균 4.6으로 한국이 더 높지만, 2021년 합계출산율은 한국 0.81, OECD 평균 1.58로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한국의 결혼 건수는 2019년~2022년 사이 20%가 감소하였고, 2022년 기준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3.9%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혼 건수 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지원을 통해 결혼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 늘린다는 정책은 OECD 국가들 중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임.
  - 비혼출산율이 10% 미만인 OECD 국가들 중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사례는 유대교와 이슬람이라는 종교문화적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적용될 수 없는 사례임.
- 저출산 대책으로서 한국의 청년 지원 정책을 설명할 때 인용되는 Richard Easterlin의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음(Easterlin, 1987).
  - 이민 제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통한 높은 수준의 총수요

유지, 전통적 성역할(traditional gender roles)의 유지라는 전제조건임.

-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충족이 불가능함.
- 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이민 확대가 불가피하고, 여성 및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이민 정책이 포함된 인구 정책으로 확대 개편하고, (혼인 확대에 중점을 두고 결혼과 출산의 결합을 전제한) 청년지원 정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재구조화가 필요함.

- 청년지원 정책은 인구정책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인구정책의 우선순위는 일가정양립,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기준으로 한 차별없는 가족지원, 이민 정책에 중점을 두고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내용

### □ 이론적 근거

○ Malthusianism, New Home Economic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등

### □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한계 분석

- OECD 등 국제사례 및 국제비교 지표 분석
- 인구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재구조화

## 9. 저출산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로 이에 대한 문제 및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 볼 필요 있음.
- 산업별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를 예상해보고, 이에 따른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 파급 효과를 예상해 볼 필요 있음.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국가적으로는 저성장 국면 진입의 우려가 증대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소득 활동의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기본소득 제도 도입, 공적 연금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 개인의 소득 활동 감소로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의 복지 정책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나. 연구 내용

-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예측
-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 예측
- 국가의 경제적, 복지적 측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

## 10. 예정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 예측과 대응 방안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매년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그에 따른 합계출산율은 매년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혼인 연령은 높아지는 현상 등은 이미 고착화되었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수많은 연구들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인구를 예측하면서, 연도별로 소멸될 수 있는 지역과 도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등 많은 지적이 있었음.
-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에 예측된 인구 대재앙이 현실화된 혹은 현실화되어가는 것에만 주목할 뿐, 현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체계적인 대응과 단계별 대책 마련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
- 특히, 인구 감소는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영향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강한 인구집단에서 클 수 있기에, 인구학적 관점에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와 평가, 그에 따른 세부 단위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나. 연구 내용

- 과거에서 예측한 우리나라 및 지역별 인구 감소 및 현상이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고 혹은 되어가고 있는지 등 인구변동 상황을 평가함. 그리고 지금의 인구적 위험성이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변동을 가져올지를 예측함.
- 앞서 이미 예측된 인구 변동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지역 단위(광역, 특정 지역 사례 포함)에서 경제적 측면(실업률, 취업률, 자립도/세금, 소득수준 등)과 사회적 측면(빈민가/빈곤, 청년/노인/여성의 이동 등), 그리고 문화적 측면(시설, 인프라, 교통 등)에서 변화가 어느 정도 발생되었고, 이때 부정적 변화를 했다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였는지, 그리고 불평등/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함. 그리고 이러한 현 시점에서의 위험성이 앞으로 최소 5~10년, 최대 20년 이후에는 어떠한지에 대한 예측을 함.
-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 단위, 지역 단위, 특정 지역 단위의 유형화를 통해 인구변동과 그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단기적 및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함.
- 위 내용은 기존의 연구와 일부 비슷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국가 정

책의 틀안에서 분석하지 않고, 새롭게 다시 국가의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함이 그 주된 목적이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임.

- 지금의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화 및 경제·사회·문화의 집중화를 분산시켜서 인구밀도를 줄여 인구의 과도한 경쟁을 줄여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든 인구밀도 부분은 특정 지역(광역단위)을 중심으로 한 메가톤급의 대인구이동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에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의 형평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둘 수 있을 것임.

- 제안하는 이 연구는 출생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측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안에서 적절한 인구를 설정하고, 다시 재정립된 지역 단위 내에서 공평하고 활기찬 질 높은 삶을 구현하기 위한 인구대응정책임.

## 11. 한국의 인구 변화 10년 후의 사회상: 인구감소는 정말 안 좋은 것인가?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라는 문제

-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목된 지 십여년이 흐르고,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에서는 사활을 걸고 인구유치에 정책 및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사람도 적어지고, 결혼하



더라도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도 적어졌으나,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여전히 큰 상황임.

- 인구가 감소하고, 그것이 역삼각형 모양의 불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현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작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 드문 상황
- 그렇다면, 정해진 미래에 대한 연착륙을 위한 지역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미래상을 기획해 둘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내용

- 인구 변화로 인해 변화할 미래에 대한 예측
  - 지역사회나 국민국가의 형태 변화, AI, IoT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미래에 대한 예측
  - 인구 증감뿐만 아니라 변화될 미래사회의 모습에 대한 현재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검토
  - 정말 인구감소가 지구에 나쁜 것인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미래예측 제시

## 12. 아이를 낳고 싶은 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권리 지원 방안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매년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고 혼인율은 감소하면서 첫 아이 출산

시 연령은 꾸준히 증가하여 30대 중후반에서의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였음.

- 그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률도 M자형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그 형상도 완화되고 있음.
- 이는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출생아의 출생이 규모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과 동시에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지난 20년간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 개발 및 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는 건강한 출생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음.

- 난임으로 예측되거나 실제 진단을 받아 난임진료를 받은 난임부부/커플의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고, 난임치료로 태어나는 아이의 규모도 9~12%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30% 후반, 특히 40대 이상에서의 난임치료는 많은 반복적 시술에 따른 합병증/부작용과 유사산을 야기하고 있음.
  - 특히 자연 유산과 사산 등 임신소모는 기혼여성 중에서 1/4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사건이고, 특히 여성근로자에서의 비율은 매우 높고,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일터 내에서의 유사산(인공임신중절 제외)은 노동의 유해위험요인 등 노동환경과 성별화된 노동구조(업무, 관리 등 자율성 등)와 연관성이 높음.

□ 이처럼 난임부부/커플과 유사산으로 임신소실을 겪는 여성(노동자)

들을 대상, 즉 아이를 간절히 낳고 싶은 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이것이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를 양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건강한 세대를 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난임부부(커플) 및 유산 지원 제도에 대해 성인지적+노동학적 및 소수자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요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함.

#### 나. 연구 내용

□ 현행 난임부부(커플) 및 유산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성인지적+노동학적+소수자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법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함.

□ 난임부부(커플) 및 여성노동자 유산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일상 생활 및 일터 내에서의 난임과 유산 원인, 건강 영향 등을 증장기적으로 추적 분석하고, 그에 따른 건강/안전 건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함.

□ 해외의 난임부부(커플) 및 여성노동자(비노동자)의 유산 관련 지원방안에서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무엇보다 여성(임산부)이 심리사회적 및 신체적으로 안녕하도록 하는 정책 사례를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의 난임부부(커플)과 유산의 실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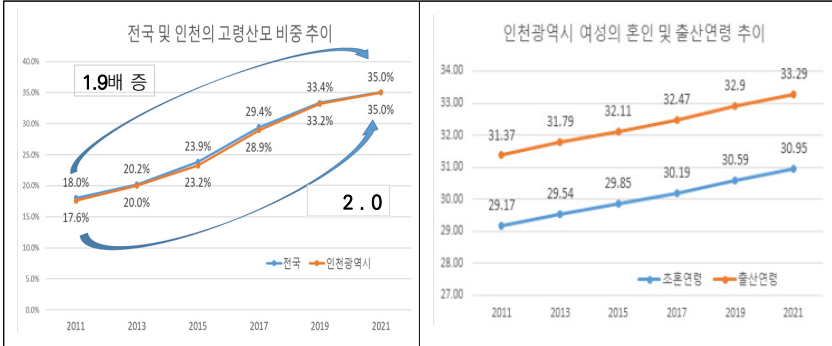
터링하고,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법정 조사 및 관련 기본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법령 및 기본계획 마련 방안을 제시함.

### 13. 전국 임신·출산 인프라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락함.
- 만혼으로 인한 출산연령의 증가로 고령산모(35세 이상)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국 고령산모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산모 연령(15~49세)의 35.0%이며, 2011년(18.0%) 대비 1.9배 증가함.
    - 인천의 경우 여성의 초혼연령은 2011년 29.17세에서 2021년 30.95세로 +1.78세 증가했으며, 출산연령은 2011년 31.37세에서 2021년 33.29세로 +1.92세 증가함.
    - 2021년 기준 전국 평균과 동일하게 35.0%가 고령산모로 나타났고 2011년(17.6%) 대비 2배 증가하였음.

[그림 4-1] 전국 및 인천광역시 고령산모 추이



주: 하단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인구동향조사(출생, 혼인).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에서 2023. 12. 5. 인출.

□ 2021년 기준 태아 사망자 수는 경기도가 8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경남, 인천 순이었음. 태아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16.7명이며, 다음으로 제주,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방도시에서 출생전후기사망, 태아사망, 모성사망비 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위험(35세 이상) 산모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 일수록 저출생 여파가 심각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었기 때문임.

78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정책협의체 운영

〈표 4-1〉 광역별 태아사망자 수 및 사망률(2020년~2021년)

(단위: 명, %)

| 구분 | 광역별 태아사망자 수 |       |       |     | 광역별 태아사망률 |       |      |             | 총출생아 수  |       |
|----|-------------|-------|-------|-----|-----------|-------|------|-------------|---------|-------|
|    | 2020년       | 2021년 |       | 증감  | 2020년     | 2021년 | 증감   | 2021년<br>순위 | 총출생아 수  | 구성비   |
|    |             | 구성비   | 증감    |     |           |       |      |             |         |       |
| 전국 | 3,205       | 3,152 | 100.0 | -53 | 11.6      | 12.0  | 0.3  |             | 263,714 | 100.0 |
| 서울 | 515         | 537   | 17.0  | 22  | 10.7      | 11.7  | 0.9  | 9           | 46,068  | 17.5  |
| 부산 | 159         | 166   | 5.3   | 7   | 10.4      | 11.4  | 0.9  | 13          | 14,612  | 5.5   |
| 대구 | 165         | 135   | 4.3   | -30 | 14.5      | 12.5  | -2.0 | 6           | 10,796  | 4.1   |
| 인천 | 182         | 188   | 6.0   | 6   | 11.2      | 12.4  | 1.2  | 7           | 15,135  | 5.7   |
| 광주 | 70          | 93    | 3.0   | 23  | 9.5       | 11.6  | 2.1  | 10          | 8,049   | 3.1   |
| 대전 | 119         | 102   | 3.2   | -17 | 15.7      | 13.6  | -2.1 | 4           | 7,516   | 2.9   |
| 울산 | 69          | 67    | 2.1   | -2  | 10.3      | 10.8  | 0.5  | 15          | 6,194   | 2.3   |
| 세종 | 36          | 31    | 1.0   | -5  | 10.3      | 8.6   | -1.7 | 17          | 3,601   | 1.4   |
| 경기 | 928         | 886   | 28.1  | -42 | 11.8      | 11.5  | -0.3 | 11          | 77,025  | 29.2  |
| 강원 | 68          | 78    | 2.5   | 10  | 8.6       | 10.5  | 1.9  | 16          | 7,435   | 2.8   |
| 충북 | 130         | 139   | 4.4   | 9   | 14.9      | 16.7  | 1.8  | 1           | 8,329   | 3.2   |
| 충남 | 156         | 121   | 3.8   | -35 | 12.9      | 10.9  | -2.0 | 14          | 11,105  | 4.2   |
| 전북 | 119         | 109   | 3.5   | -10 | 14.4      | 14.4  | 0.0  | 3           | 7,584   | 2.9   |
| 전남 | 101         | 98    | 3.1   | -3  | 10.3      | 11.5  | 1.2  | 12          | 8,528   | 3.2   |
| 경북 | 138         | 157   | 5.0   | 19  | 10.6      | 12.9  | 2.3  | 5           | 12,202  | 4.6   |
| 경남 | 208         | 189   | 6.0   | -19 | 12.2      | 12.0  | -0.2 | 8           | 15,751  | 6.0   |
| 제주 | 42          | 56    | 1.8   | 14  | 10.4      | 14.8  | 4.4  | 2           | 3,784   | 1.4   |

자료: 통계청, (2022). 2021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 보고서.

□ 최근 우리 사회의 만혼 경향으로 인한 고령산모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산모, 태아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지역별 인구 및 출산율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임신·출산 인프라 현황 및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임신·출산 인프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내용

- 지역별 인구 및 출산율 추이 분석
- 지역별 임신·출산 인프라 현황 및 진단
- 지역별 임신·출산 인프라 정책 수요 파악
- 대응방안 마련

## 14.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정책평가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정책은 저출산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평가됨.
  - 관련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저출산 대응 예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정책의 효과성은 체계적으로 평가된 바 없음.
- 연구의 필요성
  - 정책 대상 선정, 적절한 지원 형태 등을 모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실패 및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함.

## 나. 연구 내용과 정책 기여도

### □ 연구의 주요 내용

- 기존 정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
- 이 정책이 신혼부부 및 아동양육가구 주거 여건 및 결혼과 출산에 미친 효과를 분석

### □ 연구의 정책 기여도

-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증적인 기초를 마련
- 전반적으로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 간 합리적인 자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15. 일가정 양립 증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Gary Becker는 20세기 후반 선진국에서 소득수준이 증가함에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에 따라 여성의 시장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통적 성역할(traditional gender roles)에 따라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할 경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상승으로 인해 출산을 줄이게 된다고 분석하였음(Becker, 1992).
- 이후 서구사회는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와 육아 부담을 남성과 분



답하고 일가정 양립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짐.

- Gosta Esping-Andersen, Francis Goldscheider 등은 이러한 변화를 gender revolution의 2단계로 설명함(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dscheider, Bernhardt & Lappegård, 2015).
- gender revolution의 1단계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2단계는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확대로 볼 수 있음.
  - 1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안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하고, 2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보았음.
  - 일가정 양립,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확대는 서구사회에서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킨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한국은 그동안 무상보육 등 보육지원 확대에 대응하였으나 한계가 있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시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함에도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임.
- 특히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수준,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등 관련 지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2022년 또는 최근 기준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unpaid work 시간은 OECD 평균이 1.93배이지만 한국은 4.39배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남성의 unpaid work 시간 대비 paid work 시간은 OECD 평균이 2.33배이지만, 한국은 8.55배에 달함.

- 15세 미만 자녀를 가진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19년 기준 한국은 57%로 OECD에서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4번째로 낮음.
- 2019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이 1,963시간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에서 이어 OECD 4번째로 길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간 및 근무 시스템이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일가정 양립,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분담을 매우 어렵게 만 들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뿐만 아니라 연간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내용

- 이론적 근거
  - New Home Economics, Gender Equity Theory 등
- 기존 정책의 한계 분석
  - 보육 정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 OECD 등 국제 사례 및 국제 비교 지표 분석
-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 16. 2025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높아졌음.
- 긴 노동시간의 근로문화를 갖는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음.
  - 일과 가정의 생활 균형이 깨어져버리는 어려움이 발생함.
  - 일-가정 양립에서 더 나아가 개인 삶에서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음.
  - 특히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은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상 이용률은 높지 않음.
  - 이에 대한 효과성이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최근 근무/생활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므로 최대 3년 주기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내용

- 성인 19세~59세 이하 국민 대상 실태조사 실시
-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의 연속성 확보

-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 파악
  - 일반 국민의 일-생활 균형 실태 파악
  - 2022년과 비교 분석하여 변화와 흐름 파악

## 17. 보편적 육아휴직제도 시행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완화 및 고령사회 대응을 적극 추진해옴.
  - 2020년 10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개인을 노동력, 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함.
- 그러나 박선권, 김상미, 안수지, 이상직(2023)은 저출산 대응 기본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의 수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정책목표의 측면에서 ‘삶의 질 제고’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혼인율 유지·상향 및 출산 선택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 제시
  - 둘째, 정책대상의 측면에서 결혼·출산이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세대’ 혹은 ‘모든 청년’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 셋째, 정책수단의 측면에서 결혼·출산 선택의 양극화가 양육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육가구의 격차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식으로 설계
- 영아는 부모의 고용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생애초기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는 생애초기 필수적인 가족지원 제도로서 보편적 지원체계를 지향
- 생애초기 부모돌봄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영아의 권리이자 양육자의 권리·의무’로 간주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정부는 현행 고용보험기금과 분리된 별도의 재원을 가진 부모보험 (parental insurance)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영아의 양육자에게 보편적인 육아휴직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나. 연구 내용

- 영아기 가족의 양육지원제도
  - 영아 관련 수당, 육아휴직급여,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등
- 해외사례 분석(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등)
  - 예) 스웨덴의 부모휴가 제도는 출생예정일 전 연속 240일 이상 근로기준 미충족인 자, 무소득자, 저소득자, 급여를 받지 않는 회사 대표, 무소득 자영업자, 근로소득이 없었던 구직자나 학생 등에게도 일 250 SEK(31,510원), 월 7,500 SEK(945,200원)의 기본급여 지급(박은정, 이정원, 윤지연, 김난주, 2022)

-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타당성
- 부모보험제도의 기대효과/파급효과

## 18. 포용적 가족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 상황 속에서 프랑스식 대안적 가족제도(PACS)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안적 가족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유럽 많은 국가들에서는 LGBT를 대상으로 이러한 새로운 가족제도(Civil Partnership)가 도입되었고, 이성 부부간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가족 유형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가족 제도로는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층의 결혼기피와 동거 부부의 증가
    - 중장년 및 노년층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제도적 인정 필요
  - 그럼에도 기존 논의와 접근 방식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정책목표와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됨.
  - 연구보고서 형태보다는, 관련 논의를 이끌 수 있는 공개 포럼 형태로 진행

## 나. 연구 내용

- 포용적 가족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포럼 실시
  - 포용적 가족제도의 논점을 전통적 가족역할에 따라 구분
  -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포용적 가족제도의 강점과 예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주제발표 및 관련 토론

## 19. 지역별 고령화 격차 및 심화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 사례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 고령화 격차
  - 2023년 10월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은 최고 45.2%(경북 의성군)에서 최저(10.1%)까지 35.1%p의 큰 차이를 보임(행정안전부, 2023).
- 지역별 고령화 심화
  - 고령인구 비율이 2023년 45.2%인 경북 의성군 사례의 경우 2000년에는 19.7%이었는데, 이는 2023년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즉, 경북 의성군의 지난 23년 동안 고령화에 따른 지역 내 생활 전반에서의 변화를 되돌아보면, 앞으로 20~30년 동안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질 때까지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구체적인 예시를 얻을 수 있음.
  - 지난 23년 동안 경북 의성군과 같은 군 지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25% 이상 상승하는 동안 경기 화성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2001년 9.2%에서 2023년 10월 10.2%까지 불과 1%p만 상승함. 이

처럼 23년 동안 고령화율이 거의 유지된 지역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어떤 기제(예: 인구 유입)가 작동했고, 다른 지역의 고령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으면 함.

## 나. 연구 내용

- 지역별 고령화 격차 심층분석
- 지역별 고령화 심화 속도 차이 원인 분석
- 고령화 심화 지역 사례연구
  -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 내 생활 전반에서의 주요 변화
- 고령화 유지 지역 사례연구
  - 고령화 유지 기제, 타 지역의 고령화로부터 받는 영향, 지역 내 생활 전반에서의 변화
- 사례연구를 통한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활 전반에서의 변화 시나리오 도출

## 20. 초고령 노인 실태(패널) 조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노년기 확장에 따른 노인 인구 및 초고령 노인 증가에의 대응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0년 67.4세에서 2021년 83.6세로



변화하였고,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길어진 노후 삶의 특성과 욕구가 변화하고 있음.

- 가구원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1인 가구 포함)의 비율 증가, 노후 빈곤 기간 연장,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 등

□ 초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외 선행 사례는 있으나 국내는 드문 상황

- 1990년대 초반 Georgia Centenarian Study(미국)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호주(시드니), 이탈리아, 일본(도쿄) 등의 해외 주요 국가에서 초고령 노인의 실태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함의를 도출함.

## 나. 연구 내용

□ 조사 개요

- 대상: 100세 이상(또는 90세 이상) 당사자와 가족
  - 조사 대상의 특성상 사망으로 인하여 타 패널조사에 비하여 탈락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사 대상자의 기준을 90세 이상으로 설정
- 내용: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 등 다학제적 관점을 반영한 조사 문항 설계
  - 삶의 사건,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 기능, 건강, 삶의 만족, 대응양식, 사회적지지, 자아개념, 지배감, 사회참여, 가족력, 기타 특징 등

- 방법: 패널 조사
- 활용 방안
  - 우리나라 초고령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연소 /고령 노인 또는 후속 세대의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

## 21. 고령자 돌봄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23년 고령자 통계(통계청, 2023b)'에 따르면 고령자 인구가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 2025년 20.6%,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고령자 돌봄이 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됨. 고령자가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돌봄의 다양한 기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결정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고령자 돌봄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지원을 모색함.
- 고령자 돌봄 공백의 문제
- 돌봄 필요 상황에서 고령자를 둘러싼 구체적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돌봄 결정 과정의 다양한 기제들의 작동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 돌봄 상황에 대한 분절적 파악이 아닌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나. 연구 내용

- 돌봄 결정 실태 조사 - 가족 돌봄, 본인 돌봄, 시설 돌봄 등의 다양한 혼합 방식
- 돌봄 결정 과정에 대한 질적 조사 - 고령자 본인, 가족 심층 인터뷰, 돌봄 종사자 및 돌봄 기관 관련자 FGI

## 22. 코로나19 유행 시기 지역사회 노인돌봄 이용 변화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기간에도 지역사회 노인 돌봄 체계는 이용자의 돌봄 위기에 대응함.
- 이 시기 지역사회 노인 돌봄 체계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고 서비스 이용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향후 팬데믹 시기 지역사회 노인 돌봄 공백 발생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나. 연구 내용

- 코로나19 기간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정책 대응의 변화
  - 지역사회 통합 노인 돌봄 서비스 개관, 감염 위기 대응 개관
  - 코로나19 시기 방역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 개관

- 국내외 코로나19 시기 노인 돌봄에 관한 정책 대응
  - 주요국의 코로나19 시기 방역 대응, 감염 대응, 노인 돌봄 위기 대응 사례(예: 미국, 독일, 스웨덴)
  
- 코로나19 시기 지역사회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변화 분석
  - 홀몸노인/여성노인/장애노인 이용자별 서비스 변화 분석
  - 노인통합돌봄, 긴급 돌봄, 보건서비스 등 이용 변화 분석
  
- 코로나19 시기 지역사회 노인돌봄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제언
  - 코로나19 시기별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 향후 팬데믹 시기 정책 대응방안 제안

## 23.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로서 현재 노인의 10%가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일자리, 인력의 고령화, 인력의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의 76%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방문요양은 대표적인 재가서비스로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임. 그러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급여 등으로 인해 일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높음.
- 기존의 연구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주로 교육훈련의 강화와 호봉제 도입, 처우의 개선 등의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방문요양의 일자리가 불안정한 이유는 다른 한편으로는 방문요양 기관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인해 돌봄 노인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함. 특히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시장화방식을 취하면서 노인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은 장기요양노인의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상자의 수가 적어지면서 요양보호사가 일감을 적게 갖게 되는 것임.
- 이같은 장기요양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를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 나. 연구 내용

### □ 방문요양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분석

-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각 현재 방문요양의 수요와 공급 현실을 분석할 필

요가 있음.

- 즉, 도시지역의 방문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의 수요측면의 현황과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수와 같은 공급측면을 파악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과잉경쟁이 아닌 적정경쟁에 대한 분석 및 방안 연구

- 수요와 공급의 분석을 통해서 과잉경쟁이 발생하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같은 시장의 상황과 요양보호사 인력의 불안정 정도, 일자리의 부족 등과의 상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방문요양의 과잉경쟁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더 심할 것이다(가설).’에 대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과잉경쟁이 아닌 ‘적정경쟁’이 이뤄져서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이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등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연구함.

□ 적정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함.

- 진입장벽을 현실화해서 제공기관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정행위 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와 퇴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적절한 규제 조치를 통해서 적정경쟁의 시장 조성을 통한 제공기관의 안정화와 규모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요양보

호사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요구됨.

- 요컨대, 요양보호사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만이 아니라, 방문요양시장의 구조와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24. 후기 고령 노인의 지역 사회 참여 활동 연구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활동과 노화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인 후기 노년기(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 활동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자 지원 방안 모색
  -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불일치
  - 후기 고령자들의 건강 변화로 돌봄 요구 증가
  - 전기 고령기로부터 변화된 생활 실태와 물리적 환경
  - 후기 고령자 사회 참여의 급격한 감소와 활동 제한
  - 지역사회 거주 후기 고령자들의 활동 제고를 통한 역할 모색

### 나. 연구 내용

- 후기 고령자의 거주 지역 내 사회 활동 참여 실태 조사: 후기 고령자 대상 FGI 병행

- 지역 내 고령자 활동 거점 실태 조사 - 경로당, 복지관, 공원, 문화센터 등
- 지자체의 후기 고령자 사회 참여 제고 정책 및 프로그램 조사

## 25.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환경 조성방안: 아파트 활용 방안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노년기 Aging in Place 정책 필요
  - 노인의 주거환경 변화
    -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의 지속적 증가
    - 노인의 AIP 성향이 높아짐.
  -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AIP 지원 필요
    -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위해서 시설보다는 AIP 지원 필요
    - 아파트의 고령친화성 강화

### 나. 연구 내용

- 노인욕구조사 실시(혼합연구)
  - 아파트 거주 노인 설문조사
  - 아파트 거주 노인 질적조사
- 노년기 AIP 정책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 한국,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국내외 사례 분석
- 지속가능한 AIP 증진 노인 주거정책 도출
  - 한국 특성을 반영한 AIP 증진 노인 주거정책
- 아파트 주거 환경의 AIP 증진 방안 도출
  - 노인이 살기 적합한 서비스형 아파트
    - 아파트와 사회서비스 연결
    - 아파트 주거 환경 고령친화도 개선

## 26. 고령사회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경제적 부담도 가중
- 노인의 지역통합돌봄, Aging in place 강조 추세이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의 질병으로 인해 한계
- 한편,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헬스 기기의 등장,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커짐.
-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의 지역통합돌봄으로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 있음.

## 나. 연구 내용

- 고령사회 비용 증가, Aging in place 문제점 고찰
  - 고령인구 증가 추세, 돌봄 요구 증가 추세, 전문인력 부족 현황, 돌봄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가중 문제 등 개관
  - 돌봄 유형(재가, 시설) 현황, 노인 질병과 Aging in place의 한계
-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의 현황, 빅데이터 생성 현황
  - 인공지능 발전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
  - 공공, 민간의 건강 관련 빅데이터 현황
- 국내외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사례
  -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에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의 국내외 사례
- 지역사회 노인돌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논의
  - 각계 전문가 의견 분석: FGI 등
  - 활용 가능성과 법적, 제도적 한계 등에 대한 총평

## 27.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차별요소 탐색과 개선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위한 사회·문화적 배려가 필요함.
-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의 문화(MZ세대 등), 키즈존, 노키즈존 등 특정 세대를 겨냥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노인 세대가 소외되는 문화가 많아지고 있음.
  - 특정 세대를 위한 문화도 필요하지만,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문화가 필요함.
- 여러 산업영역에서 디지털 및 다국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사회적 격차가 발생함.
  - 특히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는 OECD에서도 주목하고 있음. 이는 특히 어린 아동과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음.
  - 다국적 환경을 통해 식당, 가게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공간에서 외국어 사용이 흔히 일어나고 있음.
    - 예를 들어, 식당의 화장실을 표시할 때 영문으로만 표기하여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

### 나. 연구 내용

- 노인들에게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 탐색
  - 공간, 언어, 방식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차별적 요소 탐색

- 정서적으로 노인들이 소외를 경험하는 요소 탐색
- 노인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
- 노인을 비롯한 전세대의 인식 및 노인들의 요구 파악
- 전세대를 통합하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사회·문화 형성 방안 제시

## 28. 가족구조 변화와 공적연금

###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기대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기조는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이에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임.
  - 현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임.
-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공적연금 가입자 특성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미래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부부 증가는 공적연금의 현 가입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에 예측되는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미래세대의 공적연금 충분성을 판단해 본다면 제도 개선을 위해 미래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나. 연구 내용

- 미래세대의 가구 변화 예상
  -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등 미래세대 구성원들의 가구 변화를 예상
- 미래세대의 가구 변화에 따른 가구당 또는 개인당 공적연금의 수급 규모를 예상
- 적정 노후소득 또는 노후생활비와 공적연금의 수급 규모를 비교하여 공적연금 제도 개선의 방향성 제시
  -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시기임에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 미래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에 따라서 제도 개선에 대한 미래세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결론





## 제 5 장 결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라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연구본부,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등 다양한 명칭의 부서를 설치·운영해오다가, 2018년부터 인구 및 저출산, 고령화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인구정책연구실을 최근까지 운영하여 왔음.
-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와 대응을 전사적(全社的)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의 인구정책연구실을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 핵심적인 기획 기능을 위주로 수행하는 「인구정책기획단」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산하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와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를 설치하였음.
- 이러한 조직적 변화는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책 도출에 대해 더 실효적인 정책을 생성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력을 제고하도록 자원과 연구력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2023년 인구정책기획단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와 대응을 전사적으로 하기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연구원 전체 실·단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수행하고자 내부 조직인 「인구정책기획

협의체」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음.

- 직제규정 제18조(인구정책기획단)를 토대로 연구원 내 각 영역(인구, 저출산, 고령화, 거시정책, 소득보장, 보건, 사회서비스, 청년, 사회보장재정 등)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
  - 협의체는 인구정책기획단의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과제를 개발하고 선정하며, 인구정책기획단 정책 현안 대응 연구 및 사업성 과제를 개발하고,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포럼을 기획하고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이러한 배경하에 인구정책연구는 기본적으로 원 전체의 연구진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우선적으로는 인구정책기획단의 연구진, 겸무로 구성된 연구진, 그리고 인구정책기획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되었음.
- 2023년 인구정책기획협의체를 통해 수행된 연구는 인구현상 심층 분석 분야 2개 과제, 저출산 현상에의 정책 대응 분야 5개 과제, 고령사회 정책 대응 분야 4개 과제로 총 11개 과제임. 11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인구현상 심층 분석) 출생성비 불균형에 따른 혼인 특성과 정책적 함의, 인구추계 모형 구축과 미래 인구변동 시뮬레이션
    - (저출산 현상에의 정책 대응)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 실태,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 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의 과제, 난임시술 성과의 현황과 대응과제

- (고령사회 정책 대응) 베이비부머 생애전환지원 과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인구구조변화 대응 공·사적 노후 소득보장 전망과 과제,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지속, 고착화 및 구조화를 비롯한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인구정책기획단에서 다학제적인 관점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총 28개 과제가 제안되었음.

○ 제안된 과제들은 2024년 인구정책기획협의체 논의를 거쳐서 향후 5년간 수행될 과제로 개발되고, 개발된 과제는 인구정책기획협의체가 주도가 되어 수행할 예정임.

□ 향후에도 인구정책기획협의체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인구변동에 대응한 다학제적 연구와 학술 행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 남춘호, 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성인기 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91-128.
- 노법래. (2019). 한국복지패널로 들여다본 청년의 생애사: Multistate Model로 그린 한국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의 경로와 소득 집단별 비교.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2권, 167-1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혜진. (2021). 니트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애사. 보건사회연구, 41(2), 44-63.
- 박선권, 김상미, 안수지, 이상직. (2023).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박은정, 이정원, 윤지연, 김난주. (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안선영, Cuervo, H., Wyn, J.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4-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호주멜버른대학교.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은기수, 박건, 권영인, 정수남. (2011).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4-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2015).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 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22). 2021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 보고서.
- 통계청. (2023a). 2022년 출생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23. 8. 30.).
- 통계청. (2023b). 2023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23. 9. 2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인구동향조사(출생, 혼인).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에서 2023. 12. 5. 인출.

행정안전부. (2003). 2023년 10월 주민등록인구현황.

황인도, 남윤미, 성원, 심세리, 염지인, 이병주, ... 손민규. (2023). Ⅲ. 중장기 심층연구-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

Becker, G. S. (1992). Fertility and the econom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5, 185-201.

Easterlin, R. A. (1987). *Birth and fortune(2nd ed)*. N.Y.: Basic Books.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Tyson, L., & Madgavkar, A. (2016). The great income stagnation. *Project Syndicate*, September, 7, 2016, McKinsey Global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www.mckinsey.com/mgi/overview/in-the-news/the-great-income-stagnation>

von Wachter, T. (2020). The persistent effects of initial labor market conditions for young adults and their Sourc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4), 168-194. doi: 10.1257/jep.34.4.168